

문성근, 블랙리스트 “경악·개탄스럽다”

검찰, 'MB 블랙' 첫 조사
 “최대 피해자 김민선 배우로서 치명적 피해”
 “역사적 기록 분명히 해야 다시 이런 일 없어”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운영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우 문성근(64)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를 한 것은 문씨가 처음이다. 문씨는 이명박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4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문씨는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 배포했다는데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문씨와 배우 김여진(45·여)씨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악성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블랙리스트 최대 피해자로 배우 김민선(38·여·김규리 개명 전 이름)씨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문씨는 “영화감독은 투자를 못 받으면 저예산 독립영화를 찍으면 되고, 가수나 개그맨은 방송 출연이 안 되면 콘서트를 열면 된다”면서 “하지만 배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씨의 경우 한창 자신을 키워갈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김씨와 통화를 했는데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며 “김씨가 앞으로 더 많은 연기를 할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악플은 이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씨는 “난 5공 시절인 1985년에 연기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올

라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다. 5공 때든, 6공 때든 (블랙리스트는) 다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엔 민주당부가 들어서며 없어졌던 게 복원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양해를 구하는 건 민주화 이전엔 말이 된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또 협력을 했다는 것은 꼭 법적인 처벌을 하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이날 조사를 통해 자신이 자체적으로 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늦봄문학학교’ 사할, 바디야기 부분, 제 주변 광범위한 세무조사 역시

국정원 공작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문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바디야기 부분이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활동을 했던 배우 명계남(66)씨가 과거 사행성 게임인 ‘바디야기’와 관련해 뒷돈을 챙겼고, 이를 이용해 문씨의 정치권 진출을 도왔다는 소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가공공체에 도움이 되는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과거 잘못은 꼭 청산이 돼야 한다”며 “아름이 있더라도 꼭 견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운영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과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해 수사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씨는 블랙리스트 피해 관련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19일에는 방송인 김미화씨도 검찰에 출석한다. 역시 이명박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명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자치대학 개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자치대학이 18일 전주대 대학본부 대강당에서 개강했다.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여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총 117명이 등록했다.

첫날인 18일은 김춘진 도당 위원장과 전해숙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이 강사로 나서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정책 방향’, ‘민주당의 비전과 혁신 방향’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자치대학은 2018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선거법, SNS 활용법 등 실무자 중심으로 강좌로 구성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기존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했던 아카데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자질을 갖추 것을 요구하는 강의로 꾸며졌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은 참석자 여러 분들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드릴 것”이라며 “열심히 강좌에 임해 소기의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송영무 “전술핵 없이도 핵 균형 가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핵 보유정책은 알맞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한반도 내 핵 공포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가 효과적이겠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핵 보유정책은 합당치 않고 전술핵을 갖고 유지하는 핵공포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갖지 않고도 그런 역할 할 수 있겠나” 중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정책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경제적 압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있다. 한반도에서 핵 무기가 철수될 때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한반도에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일간 주변국간 재배치하지 않는 게 보장이 되고 삼축체제를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다”고 덧붙였다. /뉴스

바른정당, 11월13일 전당대회... 신임 지도부 선출

바른정당이 11월13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회의를 11월13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지도부 선출안에 따르면 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3일부터 29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계획이다. 11월2~8일 TV토론회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고, 지난 전대 때 시행했던 권역별 토론회는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9~11일 선거기간 문자투표, 10~11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3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

검찰, ‘채용비리’ KAI 임원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사유 보완·뇌물공여 혐의 3건 추가... 대상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KAI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원이 기각한 사유를 보완했고, 뇌물공여 혐의를 3건 추가했다. 이 본부장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대상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검찰은 이 본부장이 채용을 통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 유력정치인은 이번 추가혐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내부자 위주로 가장 확실한 채용비리에 대해 서단 추가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내일 오전 9시30분 하성용 전 KAI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을 상대로 KAI 분식회계 등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KAI 경영비리 관련 주요 관련자들에게 대해 대부분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검찰은 하 전 사장 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수사는 큰 분류가 가다 잡히더라도 완성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며 “하 전 사장 소환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수사가) 진전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뉴스

2017.9.22(금) ~ 9.2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프로그램

- 장수한우마당
- 사과낚시체험
- 깃질놀이
- 토마토숙 "함께만지를 찾아라!"
- 전국 한우 인포나그리 대회
- 적과의 동침
- 애물포차 체험
- 개막 축하공연
- 페막공연 드로트 콘서트
- 레드락 페스티벌